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

(2003. 12. 15 ~ 2005. 12. 14)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차 례

서문(감사의 글)

주요 활동 사진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대통령 연설문

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3
1) 본위원회 기능 및 구성	4
2) 전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7
2. 주요 활동	B
1)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정과제 정책자문	B
가) 개요	13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16
다)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	17
라)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18
마)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19
바)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정책	20
2)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이행체계 구축	21
3) 사회적 갈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23
4) 대통령 지시사항의 수행	26
5)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사전 검토	27
6)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32
7) 위원회 주관 자료집 발간과 포럼·워크숍 개최 등	35
8) 위원회의 회의 개최	37
9) 위원회 예산	40
3. 부 록	4
1) 위원회 연혁	43
2) 제3기 위원회 명단	45
3) 주요 정책 자문보고서	46
4) 주요 회의	47



감사의 글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12. 15 ~ 2005. 12. 14) 활동의 중요한 특징을 발간사에 대신하여 이 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준비했던 발간사는 의례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총 정리하고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위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셨던 본위원, 전문위원, 연구소위 위원, 그리고 기획총명실 팀원 등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고 그러자면 왜 고마울지도 좀 설명 드려야겠기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했고 그래서 발간사로서는 간금이 될 것 같아 양해를 구한다.



위원회의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어떤 위원들은 2년간에 걸쳐 꾸준히 환경단체와 부처, 전문가 간의 공론 과정을 거치는, 어려운 정책 자문 보고서를 완성해 주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주 만나는 모임을 몇 달간 지속하면서 '머리를 맞대어 서로의 생각을 합친다'는 자부심으로 질증적인 토론을 요하는 보고서를 완성해 주었다. 이런 결과물은 모두 위원회 자료집으로 발간되었으며 이들 보고서와 회의록 정리본은 모두 합쳐 2004년에 25권, 2005년에는 30권을 넘는다. 이들 자문 보고서의 완벽한 준비로 위원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관료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정과제회의를 모두 여섯차례나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한라장대 감동조정의 긴 여정도 이때오와 회의 기록물로 모두 묶어 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위원회의 여러 사업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이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의 참여가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있으니 그 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실현과정을

경험해보고자 함은 당연했을 것이다. 많은 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회 일에 정열적으로 참가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무엇을, 어떻게, 즉 의제와 의제에 따른 이행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00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의 제1, 2기 활동을 기록한 자료로는 제1기, 2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한 의제들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이나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WSSD) 이행계획' 수립,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02년 9월에 만든 '국가부문별 지속가능발전전략' 보고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 전략, 산업, 해양수산, 교통체계구축, 산림관리, 과학기술발전, 농업, 유해물질 등의 9권이 있었으며 이외에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에 대한 광대한 분량의 2002년 보고서 2권과 의제 21 부문별 실천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대응방안(2002 요한네스버그) 등에 관한 활동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참여정부 인수위에서 제안한 환경관련 의제들이 인수위보고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들 자료에 비추어 보면 2000년 9월에서 2003년 7월까지의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부문별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개념 확산을 위한 국내, 국제 활동'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00년 9월에서 2003년 7월까지의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이러한 의제들을 연계시키면서 제3기 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전 자료를 정리하고 로의에 부처 결정할 것은 2004년 1월의 제1차 본회의이다. 우선 5개 중점과제로 1)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2)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3)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4)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5)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등을 선정하였다. 1)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은 대통령 의제이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들 5개 부문의 과제를 좀 더 세분하여 6개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2년 동안 활동하였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몇가지 사업이 더 펼쳐졌다. 2005년 6월의 환경의 날에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행사를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관한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핵심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대통령께 제출하여 만들 수 있었다. 제2기에서와 마찬가지로 39개 국가중장기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회의에도 총 15

차례, 총인원 40여명이 참가하였다. 동아시아 극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요습을 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것 역시 국제연대활동의 하나이다. 이들 활동 모두가 위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위원회의 구성'을 여기서 잠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본위원회의 위원은 비심원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신망 받는 사회인사로 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환경단체 인사 및 정부부처 인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부문별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기 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본위원회의 구성이다. 16개 광역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 의회, 광역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대표와 직능 부문별로 추천된 대표 총 77명으로 구성하여 비심원직 성격에 기반하여 국가적 갈등사안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대통령께 자문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제1기와 2기에서는 정부와 환경관련 인사 등으로 약 25명 정도로 구성하였었다. 전문위원회는 제2기에 비하여 5개 부문으로 많았으며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수 역시 10명씩 많았다. 전문위원회 산하에 연구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을 두어 정책보고서의 초안들이 작성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는 토론, 공론 또는 협의가 위원회 내의 정적임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회의의 체계를 갖추었다. 어떤 의제를 다루든지 의제별 립에는 관련당사자가 고르게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토론 내지 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일파의 압박 없이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함께 이르도록 안내하였다. '공론화' 또는 '협의(consultation)'라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을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공론화, 또는 협의란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론화 및 협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물관리 정책'의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물수요 예측치의 과다추정'에 대한 출판한 토론과 협의, 공감대기 전문가와 부처 등의 관련 당사자들 간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라고 하겠다. 가치관과 관점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 또 전문지식의 차이 등이 토론자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들이나 이러한 '차이'를 넘어서기도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도 하는 과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론화, 또는 협의는 물,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극도의 이용과 보전, 교통 등 위원회에서

다른 부문별 과제에서 이루어졌고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섯 번에 걸친 국정과제회의 보고와 '지속가능발전 비전' 대통령 연설 등은 이러한 공론화의 결과물이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 힘이 많이 드는 이 심폐한 과정을 이끌어 준 위원들과 '림장과 립원' 등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록'을 특히 강조한 것도 다른 하나의 특징이다.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지않아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제3기 위원회에서는 과제별로 진행된 공론화의 과정 모두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은 공론회의 최종 결과물인 '정책보고서' 이외에도 그 과정을 담은 회의록과 연구보고서 등 다양하며 발대한 양의 '한탄강행 갈등조정 관련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총 60여권에 이른다. 이들 위원회 발간자료들은 '정책'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석사 또는 박사 지망생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금년 12월의 차기 위원회로의 인계도 이 자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학술적으로도 이용되는 장점을 가지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었다. '기록'을 책임졌던 '림장과 립원'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제3기 위원회의 성과를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국가의 부문별 장기정책에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이때 '구체화'가 중요한데, 구체화는 실정권 의제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핵심과제와 세부이행과제를 이행시기까지를 포함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면 그 정책의제가 대통령지시사항으로 부처에서 '이행을 담보'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1기, 2기에서 발간된 여러 정책보고서들이 부처의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않아서 그 당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부처에서의 이행'의 수준을 가늠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어떤 가교 역할을 했는지는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일단은 제3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에 기여했음을 기록해 놓으면 차기때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구체화'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이라는 의제의 경우엔 '국가종합수요관리계획의 수립', '광역발달서 평판리로의 정책전환', '음용수 상습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질의 제고' 등의 핵심과제와 이를 이행하는 세부과제들을 그 이행시기와 함께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부처에서 시행토록 이관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수행한 과제들이 바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 정책,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등이다. '구체화'의 과정에는 '노력'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함께 일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제3기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집속한 정책 자문안'이 부처에서 이행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극점과제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 구조 때문이다. 실질적 자문을 보장해 주었던 이 구조가 제1, 2기 위원회와 제3기 위원회의 차이이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사항은 환경단체의 자체간담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공동간담회와 5개 전문위원회, 본위원회의 여러 번에 걸친 회의에서 토론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여기에서 부록에 실었다. 환경단체로부터의 주요 비판으로는 '사회 현안문제, 지역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적용되고 공감을 얻었는가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이 강조되었다. '참여정부의 각종 공간개발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의 정책자문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요구된 시대적 역할이었음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방사선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되고 검증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각 부처에 대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극적인 리더 역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 위주의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되었음'을 환경단체는 반복해서 비판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 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라고도 하였으나 '정책자문'이 '정책내용의 생산'으로서 가능하다는 위원장 판단으로 현안문제에 적극대응하지는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치기 위원회에의 제언사항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구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할 것인가, 전문가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래서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상의 강화는 주로 대통령자문위원회보다 위상을 더 강화하는, 집행력을 가진, 일종의 '법적위원회', '행정위원회'를 염두에 둔 의견이라고 하였다.

지난 2년간 위원장으로서 경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은 '극점과제위원회'라는 구조 속에서 위원회 자문안의 실질적 이행을 대통령이 직접 담보해 준 위원회에서 제1기, 2기 위원회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의 이행, 또는 집행이 부처에서는 기부감을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직접 집행력을 가진 법적 위원회로 바꾸어 부처를 추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법적 위원회가 효율적이라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충분히, 그리고 면밀히 많은 관련당사자들이 함께 토론해야 한다. 지난 2년간도 위원회 내에서 이러한 토론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는 모두 자료집으로 정리되어 있다. 차기 위원회에서 제도적 장치까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결점이 있기를 바란다.

위에서 제3기 위원회의 성과의 하나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국가의 부문별 장기 정책으로 구체화' 시켰음을 꼽았다. 이는 '구체화'가 없으면 명문, 담위성 또는 목소리로만 존재해서 실효성이 될하다는 생각에 제3기 위원회에서 노력한 부분이다. 대신에 위원회가 경험했던,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이란 매우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했던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토론, 공론, 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위원회의 대통령 자문안이 부처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모습으로 만들어지므로 '꿈'이 많이 드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본위원, 전문위원, 연구소외(립) 위원들이 이 과정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 대한 고마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

이율러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론, 공론, 협의'의 과정을 만들어 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의 '림장과 립원'들의 노고이다. 어떤 의제는 일년이 넘도록 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해 주심사하고 계속 부탁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했고 또 부처와 논의 논쟁을 모래도록 펼쳐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고 보고 슬라이드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꼼꼼함에 부딪쳐 마음 고생도 많이 했다. 여러 품바구니에 끼어서 정말로 고생한 분들이 '림장과 립원'이었음을 꼭 알리고 싶다. 지난 2년간의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2005년 12월 1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고 철 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 경제성장 · 환경보전 · 사회통합 -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2003. 12. 15)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출범기념



운영위원회 (2004. 3. 30)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2004. 3. 3)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2004. 3. 10)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2004. 3. 11)



도시관리정책 전문위원회 (2004. 3. 12)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2004. 3. 19)

본위원회의 회의



제1차 본회의 (2004. 1. 16)



제2차 본회의 (2004. 9. 20)



제3차 본회의 (2004. 11. 12)



제4차 본회의 (2005. 1. 7)



제5차 본회의 (2005. 4. 29)



제6차 본회의 (2005. 10. 12)

국정과제보고 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 소위원회의 활동



출원지역 주민설명회 전경 (2004. 5. 1)



한탄강댐조정회의 전경 (2004. 6. 3)



한탄강댐조정소위 한탄강 답사 (2004. 3. 19)



한탄강댐조정회의 합의문 대표자서명 기념사진 (2004. 8. 27)



한탄강댐조정회의 최종합의 기념사진 (2004. 8. 27)

포럼 · 세미나 · 워크숍



제1회 갈등관리포럼 (2004. 6. 22)



제2회 갈등관리포럼 (2004. 7. 2)



사회복지관을 위한 갈등관리강좌 워크숍 (2004. 7. 28)



공동감행과 참여적 의사결정 워크숍 (2005. 5. 6)



1차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 (2005. 9. 5~9)



2차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 (2005. 11. 14~18)

포럼 · 세미나 · 워크숍



대외원조(ODA) 정책 워크숍 (2004. 11. 26~27)



고도성장세 발효이후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2006. 6. 14)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워크숍 (2005. 10. 11)



동아시아 NCSO 워크숍 (2005. 10. 20~21)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2005. 12. 2)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회 환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널리 확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빠른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우선의 논리 앞에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환경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속가능 발전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입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밀착지 수립하고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환경상 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질모임 총량관리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절약과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원도를 비롯한 저공미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체제도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나가고자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황사, 산성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늘어진 권리의식에 비해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는 우리의 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정책을 비롯해서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기야 하겠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차이와 갈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실권이 지리나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되기는 선진한국 건설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4일
대통령 노무현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 1) 본위원회 기능 및 구성
- 2) 전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3기 위원회는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직접 관장하는 국정과제위원회의의 일원으로 그 위상이 변화되면서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정과제에 관한 정책자문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기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2003.11.11 개정) 제2조의 규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①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②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③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관리, ④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⑤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 ⑥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⑦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는 총 76명¹⁾의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하고, 본위원회 아래에 위원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전문위원회 간사 등 19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본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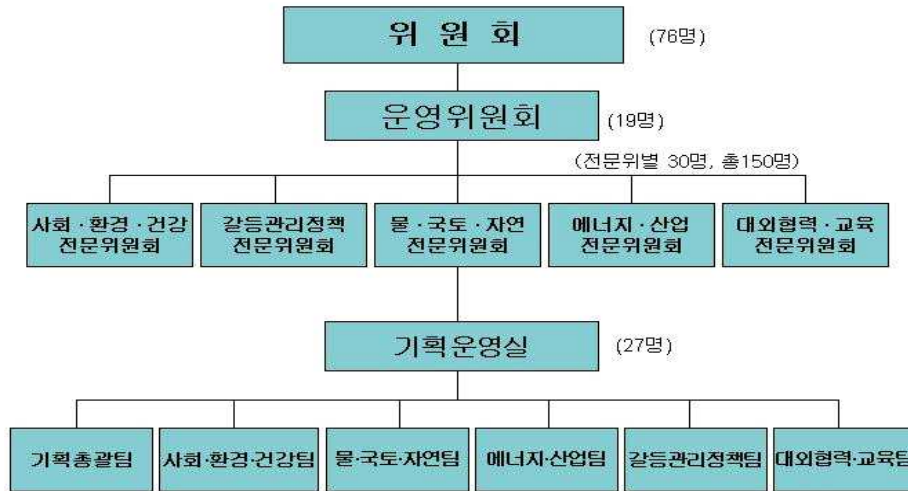
정책분야별 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를 위하여 5개 전문위원회(사회·환경·건강, 갈등관리정책,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6개 팀으로 구성된 기획운영실을 두었다.

〈표 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구 분	주 요 기 능	구 성
본 위 원 회	○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및 갈등관련 과제에 대한 상원적·배심원적 기능	76명 (지역대표 48명, 직능대표 28명)
운영위원회	○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19명
전문위원회(5개)	○ 과제발굴 및 연구·검토, 소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위별 30명

1) 당초 총 7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나, 2005년 1월 14일 이후 76명으로 운영

〈그림 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



1) 본위원회 기능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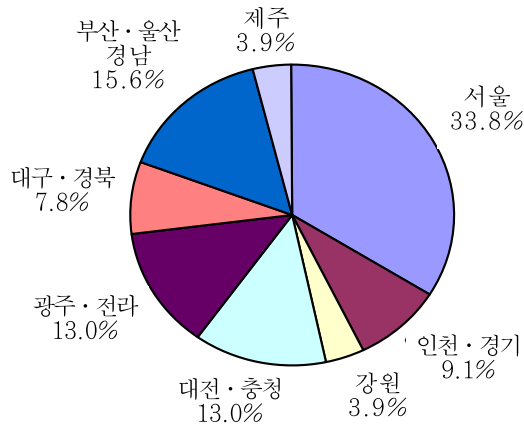
본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한 위원회 소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갈등관련 과제에 대한 상원적·배심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은 첫째, 사회적 합의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둘째, 국가(Government) 중심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참여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전환하고, 셋째, 중앙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에서 풀뿌리 지역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한다는 세 가지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표 2〉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구성

시·도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로 3명씩 선정 (총 48명) ○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시·도별 시민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 (추천 주체별로 2배수를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위촉)
대통령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대표성을 고려하여 총 28명을 선정 ○ 학계, 여성계, 산업계,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농어민, 문화예술, 종교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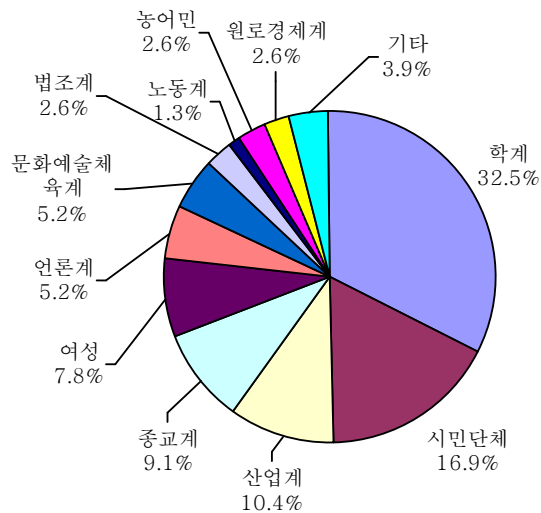
출범 당시의 본위원회 위원구성의 특징은 첫째, 상향식 추천에 의한 지역균형 안배 인사로 서울과 중앙의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26명으로 34%, 지방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51명, 66%로 지방인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림 2〉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77명의 활동지역 비율



둘째, 학계(33%), 시민단체(17%), 산업계(10%), 종교계(9%), 여성계(8%) 등 직능분야별로 위원을 균형있게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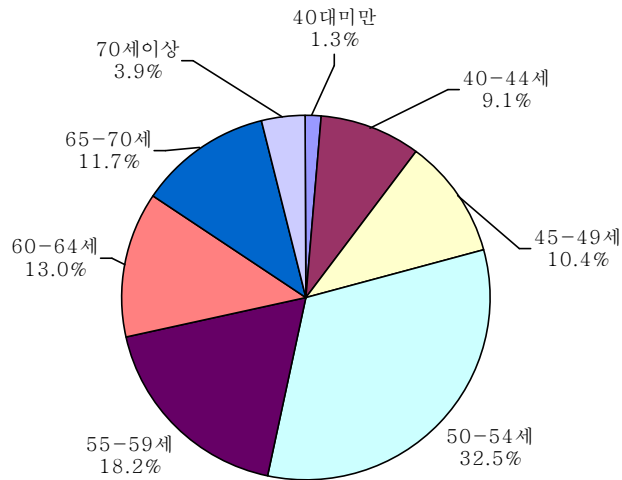
〈그림 3〉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77명의 직능 비율



6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

셋째, 연령별 분포로 볼 때 50대(51%)가 주축을 이루며, 60대(25%), 70대 이상(4%) 원로인사도 고루 위촉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혜롭고 권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대(1%), 40대(20%) 위원들도 상당수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젊게 활동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77명의 연령 비율



넷째, 여성인사를 다수 포함(25%)하여 양성평등균형을 시도하였다. 특히 직능대표 추천인사 중 여성비율은 45% 이었다.

〈표 3〉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위원 77명의 남녀 비율

추천 구분	남 (%)	여 (%)
지역 추천	42 (87)	6 (13)
직능별 추천	16 (55)	13 (45)
소계	58 (75)	19 (25)

2) 전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전문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검토 기능을 담당 하였으며, 본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별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세칙」 제20조에 따라 물관리정책, 에너지·산업정책, 갈등관리정책, 사회·환경·건강정책, 대외협력·교육 등 주요 연구·검토 분야별로 5개 전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별 주요 연구·검토 업무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5개 전문위원회별 주요 업무 분야

전문위원회	주요 업무 분야
사회·환경·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 환경·건강분야 주요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 빈곤, 인구,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사회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9개 국가주요중장기계획 중 소관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 사회 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39개 국가주요중장기계획 중 소관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물·국토·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 국토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에 관한 정책자문 ○ 39개 국가주요중장기계획 중 소관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자문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정책자문 ○ 39개 국가주요중장기계획 중 소관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SD 후속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LCSD, 지방의제) ○ 학교, 사회 등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홍보 ○ 39개 국가주요중장기계획 중 소관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5개 전문위원회에서는 소관과제의 연구·검토를 위하여 총 37개의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을 운영하였으며, 총 272명의 전문가가 활동하였다.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는 총 5개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을 운영하였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적용 가능성 평가 등 4개 과제와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을 검토하였다.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는 총 9개의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갈등관리 교육 및 포럼 운영, 갈등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한탄강댐 갈등조정 프로세스 적용, 갈등관리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워크숍 등 6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는 총 9개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정책 등 4개 정책 자문 과제와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및 국토이용 및 보전 정보통합시스템 구축방안 등 2개의 대통령 지시사항,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등 5개의 정부 중장기계획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에너지·산업정책 전문위원회는 총 10개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을 운영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및 공론화,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수립 등 3개 정책 자문과제와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등 2개의 정부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였다.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는 총 4개의 소위원회 또는 연구팀에서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 동아시아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등의 4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5〉 2003~2005년 5개 전문위원회별 소위원회 구성 및 추진과제

추진과제	소위원회·연구팀 운영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적용가능성 평가 ○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연구팀(12명),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소위원회(7명),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연구 소위원회(8명),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연구 소위원회(4명),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현장적용가능성 연구 소위원회(13명) (총 5개)

추진과제	소위원회·연구팀 운영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갈등관리 교육 및 포럼 운영 ○ 갈등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 한탄강댐 갈등조정 프로세스 적용 ○ 갈등관리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워크숍 	갈등해결정책연구팀(21명),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8명), 법·제도개선팀(29명),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6명), 한탄강댐갈등조정 소위원회(4명), 한탄강댐갈등조정 소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13명),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24명), 갈등관리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워크숍 준비위원회(24명), 갈등포럼 준비 소위원회(14명) (총 9개)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정책 ○ 대통령 지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 - 국토이용 및 보전 정보통합시스템 구축방안 ○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04~'16) - 도로정비기본계획('06~'10) 변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05~'20) - 제13차 수도권 정비계획 	물관리정책연구팀(18명), 국정과제보고 준비회의(8명), 교통정책연구팀(18명), 국토정책연구팀(13명),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24명), 골프장 건설규제개선안 자문보고서 작성팀(15명),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 소위원회(4명), 해양정책연구보고서 작성팀(8명), 국토이용보전 세분화 정책 자문연구팀(10명), (총 9개)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및 공론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수립 ○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04~'17) 	에너지정책연구팀(30명), '20년 에너지예측·분석팀(6명), 에너지정책·공론화팀(5명), 에너지기본법 검토 소위원회(9명),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검토 소위원회(7명),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6명),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9명),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7명), 에너지정책 공론화방안연구팀(방폐장정책)(7명), 산업정책연구팀(9명) (총 10개)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 정부개발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 ○ 동아시아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소위원회(8명), 교육소위원회(13명), 지방의제21팀(6명), 지방의제21 소위원회(8명) (총 4개)

주요 활동

- 1)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정과제 정책자문
- 2)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이행체계 구축
- 3) 사회적 갈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4) 대통령 지시사항의 수행
- 5)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사전 검토
- 6)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7) 위원회 주관 자료집 발간과 포럼·워크숍 개최 등
- 8) 위원회의 회의 개최
- 9) 위원회 예산

1)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정과제 정책자문

가) 개요

참여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과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2003년 11월 11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위원회의 일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준비한 정책보고서를 토론하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련부처에 전달되고 집행되는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참여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국정과제와 비전 중에서 특히 100대 과제²⁾를 중점 관리대상인 '국정과제 로드맵' 과제로 추진하였다. 로드맵의 기획과 정책화 작업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내용을 토론·협의하고 이를 전문(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정책 자문안은 국정과제회의의 4단계를 거쳐 확정 함으로써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업무 협조가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정부부처가 소홀하기 쉬운 중장기 국가 전략과제, 범부처적인 관련사항, 또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의제, 그리고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6대 로드맵 국정과제, 16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6대 로드맵 국정과제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다. 이때 6대 로드맵 과제란 중점과제 또는 우선이행과제(priorities) 등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13개 과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30개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16개 과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5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8개 과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6개 과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12개 과제), 교육혁신위원회(5개 과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5개 과제)

14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

6대 국정과제 추진결과 등을 토대로 임기 2년 동안에 총 8회의 국정과제회의(또는 국정과제조정회의) 보고와 총 4회의 서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드렸으며, 대표적인 자문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안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 사회적 갈등의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표 6〉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한 6대 국정과제 및 16개 세부과제

정책분야	6대 로드맵 국정과제	세부과제
갈등관리	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마련
		②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	③ 갈등관리교육훈련 및 포럼운영
		④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원
에너지·산업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산업정책 수립	⑤ 한탄강댐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발·적용
		⑥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물·국토·자연	④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	⑦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
		⑧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수립
	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	⑨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
		⑩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정책 수립
지속가능발전전략	⑥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⑪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
		⑫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정책 수립
		⑬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⑭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 적용가능성 평가
		⑮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수립
		⑯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

〈표 7〉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정책자문 실적

보고 내용	일시	대통령 자문
① 지속가능한 에너지 주요정책과제와 논의구조	'03.12.24	제33차 국정과제회의
② 참여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04.2.12	제38차 국정과제회의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	'04.6.24	제48차 국정과제회의
④ 갈등관리기본법 및 법·제도개선 방안	'04.9.30	서면보고
⑤ 한탄강댐 갈등조정안 마련 및 추진계획	'04.11.2	국정과제조정회의
⑥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안*	'05.4.1	서면보고
⑦ 한탄강댐 관련 공동협의회 구성·운영 및 평가	'05.5.24	서면보고
⑧ 지속가능발전비전과 핵심이행과제	'05. 6.1	국정과제조정회의
⑨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05.6.22	제62차 국정과제회의
⑩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05.10.19	제67차 국정과제회의
⑪ 지속가능한 교통관리정책	'05.11.2	제69차 국정과제회의**
⑫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05.12	서면보고중

주) * 표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한 과제임
 ** 국무총리 주재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정책자문안을 위원회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관련 전문가, 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자문안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 또는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상정되어 토론되었으며, 토론 후의 결정사항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형태로 관련부처에 시행토록 이관하였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표 8〉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자문 업무과정

단계	개요	주요 내용	
1. 정책과제 선정	정책과제의 도출 및 선정	① 의무과제 : 대통령 자문 요청 및 (참여정부 선정 100대) 국정과제 ② 제안과제 : 지속위 내부(본·운영·특별·전문위원회 등), 정부부처·국회·NGO·지역주민 등의 제안	
2. 정책연구	정책과제의 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과정	① 진행방식 결정	○ 전문위원회의 검토, 추진 방식 결정
		② 연구팀 구성 및 진행방식 결정	○ 연구팀구성 : 과제담당 연구소위 또는 연구TF 구성 ○ 추진방식 : A. 회의방식 B. 연구용역 C. 지역간담회 D. 텔파이조사 E. 현장조사 F. 자문위원회 자문 등
3. 정책수립	정책연구 결과 검토 및 정책방안 도출	③ 연구진행	○ 담당 : 연구팀장 초안 작성 및 팀원 보완 또는 외부 전문가 작성 ○ 방식 : 연구팀 내부 검토, 워크숍, 공청회
		○ 연구팀의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및 의견 수렴 - 필요시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검토 등 공론화과정 진행 ○ 전문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위원회 정책방안(초안) 확정	
4. 정책협의	정책방안에 기초한 관련 부처협의	① 협의	○ 관련 부처와의 개별, 공동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
		② 보고서 확정	○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한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결정 및 최종 보고서 작성 ○ 내부 의결의 경우,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 (필요시 본위원회 의결)
5. 정책자문	정책방안 보고	○ 대통령 지시과제 및 국정과제 - 대면보고(국정과제회의, 국정과제조정회의) 또는 서면보고 - 정책실 및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 방식 및 일정 결정 ※ 대통령 보고 이전의 협의과정에서 보완 필요 시, 보완과정 진행	
6. 정책결정	대통령의 정책 결정	① 정책결정 : 관련 부처로 정책집행 이관 ② 후속과제 지시 : 정책연구과정으로 이행	
	정책방안 보완 및 보고	○ 정책보완, 후속과제 지시는 위원회 업무로 지시된 경우 위원회 내부 프로세스 진행	
7. 정책이행	부처이관	○ 결정된 정책은 관련부처로 이관하여 추진	
8. 모니터링	부처이관 정책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이행 상황의 점검과 평가 진행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장기적인 에너지정책방향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통해 두 차례의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12월 24일 제33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 주요정책과제와 논의구조”에 대해 보고하였고, 2004년 6월 24일 제48차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 전력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후 후속과제로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에너지정책 공론화 방안, 장기전원구성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 등 4개의 과제에 대한 자문안을 준비하였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 및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제안 초안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비전과 정책과제」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부분에 그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2005년 6월 1일 국정과제조정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장기전원구성정책은 2005년 11월 현재 서면보고를 추진 중이다.

에너지수요의 급증과 고유가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수요관리가 강화된 에너지공급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 보급의 확대, 에너지 가격구조를 환경친화형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정책 공론화 방안에서는 각종 에너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된 국·내외 갈등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과거 정부주도의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 및 절차의 투명성, 의사결정과정의 공평성, 논의의 심사 숙고성,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의 참여라는 공론화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 성격의 공론화 기구가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전원구성정책에서는 장기적 발전설비 구성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전력수급 안정성(전력예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원자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수력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설비가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원구성을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기준별 평가와 계층가중치법에 의한 평가 등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성 자료 확보와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연구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기전원구성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 ① 전력수급안정 및 적정 전원구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② 장기전원구성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③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통하여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중립적인 관계 전문가간의 토론을 거쳐 적정원전비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로드맵을 수립할 때 기존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부처별 사업 및 프로그램들의 실질적 통합관리 및 조정을 통해 정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국내 배출량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③적극적 투자와 R&D를 통해 국가 및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④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한다.

다)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

지속가능한 연안 및 해양관리정책의 자문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4년 6월 해양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여한 연안해양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전문가 설문문을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를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의 발제 및 토론을 거쳐 8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8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05년 3월까지 자문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차례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자문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자문안은 대통령 주재 제62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8대 중점 추진과제로 ①자연 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시행, ②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③하구환경관리 체계 구축, ④이원화된 연안해역 수질환경관리 체제 개선, ⑤발전소 온배수 관리체제 확립, ⑥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및 대륙붕의 효율적 관리, ⑦서해 접경연안 국제해양 평화공원 추진, ⑧정책통합과 참여의 해양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되었다. 이 정책의 시행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가 각 정책과제별로 관할 부처 또는 협력 부처로 참여하고, 대부분의 과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점오염원 배출허가 시스템 개선, 발전소 냉각방식 개선, 서해 접경연안 국제 해양 평화공원 지정 등과 같은 과제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연안·해양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전이 환경대리는 ‘공간적 속성’과 산업, 도시, 교통, 수산, 생태계 환경보호, 항만, 해운 등 다양한 이용행위가 발생하는 ‘기능적 속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으로서 위 정책제안들은 정책통합, 공간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안·해양의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이용·개발 위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축인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사회적 평등(Equity)의 삼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적 평등 분야에 중점을 둔 연안·해양 정책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초를 마련하였다.

라)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2005년 10월 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보고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은 2004년 2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8명으로 '물관리정책연구팀(18명)'을 구성하여 추진한 정책자문 과제로써, 5차례의 관계부처 협의와 4차례의 시민환경단체와의 토론회를 거쳐 자문안을 완성하였다.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서 확정되어 관련 부처에 이관된 정책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급예측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확한 장래 물수요량을 산정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하고, 물공급·이용량·재이용량 실태 파악 등 물관련 기초 통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물수요관리 10개년('07~'16)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6년까지 수요증가의 50% 이상이 수요관리로 충당되도록 현재 환경부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전체적인 물부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 붕괴 및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 건설, 댐간 연계운영강화, 유희(遊休) 농업용댐 전용을 통해 신규댐 수요를 흡수하되, 댐건설 계획단계부터 관련 당사자와 유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 정착을 위하여 4대강 중·하류 구간중 수영이 가능한 II급수 하천구간 비율을 58%('04년)에서 70%로 제고('15년)하는 등 수질목표를 재조정하고,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며, 수변구역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음용수 상습 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도서 등 상습 물부족 지역에 대해 식수전용 저수지, 지하수, 빗물이용시설 설치, 해수담수화 등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식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을 일반상수도 수준으로 확대하며,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 광역상수도과 같이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도·농간 물관리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하수 공개념(公概念) 및 불법개발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리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홍수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유역내 홍수총량 배분방식에 의한 홍수방어수단을 도입하고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 사전예방적 홍수방어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등이다.

올해 초인 2005년 2월 17일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의 7대 핵심 정책방향 외에 물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정책 협의·조정 기능 신설, 국무조정실에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신설, 물관리 업무 단일부서로 통합 등 세 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국정과제회의 결과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칭)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

하는 방안이 기본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7대 핵심과제와 관리체계 개편안에 대한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집결해 나가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것이다.

마)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자문안 마련을 위하여 2004년 6월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내에 교통·철도·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이루어진 18명의 교통정책연구팀을 구성하고, 2005년 5월까지 약 30여 차례에 걸친 발제 및 토론을 하였다.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시민단체 토론회, 부처 협의를 통하여 자문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2005년 11월 2일 총리주재 제69회 국정과제회의에 상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은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간의 시설투자 불균형 심화, 도로부문 투자 집중,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보행·자전거 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기반도 취약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자문안에서는 도로·철도간 시설투자의 형평성 제고,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안전 강화의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4개핵심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과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그 집행이 관련부처로 이관되었다. ①수송수단간 효율적 수송분담구조의 확립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의 수정·보완, ②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 및 일반철도의 유지보수 지원 확대 검토, ③철도화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복합물류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④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최적 교통수단 선택 유도 방안' 마련, ⑤신도시의 「대중교통중심 도시」 개발, ⑥'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지구단위 교통환경개선, ⑦폐도로·폐선로 활용대책 및 보행-자전거 도로 확보방안 수립, ⑧'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06~'10)'의 수립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 ⑨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위험운전자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합리화, ⑩초·중·고교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이다.

위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교통부분에서의 3E(Economy, Environment, Equity)의 삼각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지속가능발전 교통정책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행평가 지표의 개발·활용, 지역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교육·홍보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정책

2004년 5월부터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 내에 도시계획, 환경정책, 토지이용, 토지정책, 농지제도 등 관계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국토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약 20여 차례의 발제 및 토론과정과 을 거쳐 국토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이후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공동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5년 5월 '지속가능한 국토정책'안을 마련하였다. 6월 1일 '지속가능발전비전'에 대한 국정과제회의시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내용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새롭게 연구팀(7명)을 보강하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보전정책'에 관한 자문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이 강화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경제적 효율성의 기능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추구, 둘째,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토관리로의 전환, 셋째,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추구하는 국토개발정책 강화'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①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성 강화, ②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제 도입, ③환경용량에 따른 국토관리제도 도입, ④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확대, ⑤행정조직 및 재정시스템 개편, ⑥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개발 최소화, ⑦규제손실보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전략 수립 등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위의 정책 자문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거쳐 대통령 서면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광범위하고 총괄적 성격의 위의 정책 제안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이행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또는 비전과 관련해서는 1996년의 국무총리실주관 '의제21 국가 실천계획'의 수립이 있었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1996년의 국가실천계획은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쳤고 2000년의 선언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대한 선언이었으나 실질적 성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2005년 6월 세계환경의 날에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선언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하였다.

비전선언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 정책 제안'이 되어야 한다는 기초에서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과제를 중심으로, 여기서 경제부분의 '환경친화적 조세체계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관련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추가하여 구체적 내용으로 준비하였다. 우선 비전의 정책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기초로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비전의 정책 내용은 2005년 6월 1일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이에 기반한 연설문을 이에 따라 완성하였다.

비전에서 제시할 정책 내용과 연설문에 대한 사전토론 및 협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선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 보고서 형태의 내용은 정리하였고 이는 후에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집 2005-12로 발간하였다. 또한 연설문 작성을 위해 연설문안 작성 기초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연설문 초안을 완성하였다. 연설문 초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의견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9개 단체와의 간담회(2005.5.11) 자문위원회 회의(2005.5.17)를 통해 이루어졌다. 운영위원회의 최종 보고(2005.5.18)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 재정경제부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쟁점사항이 다시 정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4일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식에 참석하여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선언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정책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0년 6월 5일 발표된 국민의 정부의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과 비교한다면 이번 선언은 명실상부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전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섯가지로 ①개발과 보전을 통합을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 ②생활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③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의 정착, ④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 ⑤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체계 구축 등 5대 과제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부처별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토록 권고하고 2005년 내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대상과제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체 정책과제와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과제로 구분하여 총 49개 과제가 선정되어있고, 관계 부처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부처별로 소관 이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상태나 달성도' 등을 계량화하고, 각 부처의 이행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 사업도 펼쳤다.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13명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적용가능성 연구소위원회'를 2004년 9월 이후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 이 결과는 2005년에 완성된 형태로 발표하고자 하였으나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은 자료집으로 묶어 내어놓을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단순히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정도 등 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환경지표와는 달리 정보 그 자체보다는 경제발전, 인구증가, 기술이나 문화변동 등과 같은 다른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연구소위원회에서는 14개 분야별 시계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13차례(워크숍 2회 포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총 169개 지표를 최종지표로 선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차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3) 사회적 갈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³⁾

정부내에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03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현안 24개를 선정하여 그 현황과 대책을 논의한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 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기존 기능에 추가하여 환경관련 각종 갈등의 거국적 조정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능을 보강'하도록 지시하였다. 제3기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나 풀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여기서 청문을 하고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이 대안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상원적·배심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우선 전문위원회 중 하나를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로부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4일에 총 21명으로 발족된 갈등관리정책 연구팀은 약 3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마련, 2004년 2월 12일에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때의 주요내용은 갈등관리기본법⁴⁾의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립,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 구성 등이었다.

2003년 10월의 대통령 보고를 출발점으로 하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갈등관리기본법 준비팀을 2004년 3월부터 가동하여 2004년 9월에 법 초안을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드렸고, 10월에 이 법의 제정 업무를 입법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이 법을 더 다듬어서 2005년 5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에는 갈등영향분석제도,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갈등관리위원회⁵⁾의 설치, 갈등조정회의의 운영 등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되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박재묵, 참여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 : 관련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에서 발췌 인용

4) 현재 이 법안의 명칭은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5) 국무조정실의 수정·보완과정에서 갈등관리위원회의 명칭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됨

두 번째 활동은 한탄강댐 관련 갈등조정 활동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한 한탄강댐 갈등조정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대화와 합의의 원칙하에 중립적 조정자에 의한 갈등해결을 시도한 첫 사례로서 당사자간 합의안 도출 등 대안적 갈등해결 절차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해당사자들은 갈등조정 및 공동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한탄강댐 갈등조정은 2004년 2월에 6명의 전문가로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하여 시작하였다. 5월 11일에는 '준비단'을 해체하고 대신에 4명의 전문가로 조정소위를 구성하였다. 이후 8월까지 3개월 반 동안 당사자(찬성측 주민, 반대측 주민,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 환경단체) 대표로 구성된 한탄강댐 조정회의가 운영되었으며, 2004년 8월 27일에는 '관련당사자 대표는 한탄강댐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에 한탄강댐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최종합의문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소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천변저류지와 제방안' 등 6개 대안을 검증한 후 2004년 11월 2일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결정문에는 '기존의 한탄강댐 계획은 무효화'하고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 효과, 규모 및 안정성에 한함)를 밟아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주문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동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운영소위에서 약 5개월에 걸쳐 관련 당사자와 공동 협의회 구성을 협의 하였으나 공동협의회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공동협의회 구성이 무산되었다. 현재 한탄강댐 관련 갈등조정 업무는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2006년 5월까지 홍수대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세 번째 활동은 공공갈등의 발생이 법과 제도의 미흡함에 있다고 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자문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갈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공공개발관련 법률을 (건설교통분야: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댐건설법, 하천법 등, 환경생태분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해양수산분야: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기타 분야: 지방자치법) 대상으로 갈등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수렴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3기 위원회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가 양성 프로

그럼 개발이다. 2004년 5월 갈등다발부처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강사) 인력 풀을 제공하였고,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교육기관에 전문과정 개설(21개 과정)을 독려하고 지원하였다. 아울러 2004년 6월에 갈등관리 포럼, 2004년 7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2005년 5월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인프라 구축 수요에 대비하고자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갈등관리 교육교재를 개발 하였다. 이는 행정연구원, KDI,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5명이 참여한 연구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교재를 가지고 2005년 9월 5일에서 9월 9일까지 5일간 경기도 파주시의 흥원연수원에서 제1차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총 120명에 달하는 교육 희망자 중에서 공무원, NGO, 변호사, 교수 등 32명을 선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과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11월 14일에서 18일의 5일간, 역시 32명이 참여한 '제2차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숍을 가질 수 있었다.

〈표 9〉 2003~2005년 갈등관리교육 및 포럼 등 개최

제 목	일 자	참석자	참석자
6회		544명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과제	'04.6.22	67명	공무원, 공기업, NGO, 위원 등
○ 사회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4.7.2	60명	정호원(조지메이슨대) 발제, 공무원, 공기업, NGO 등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정책 워크숍	'04.7.28	153명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부시장,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05.5.6	200명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공기업 등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1차)	'05.9.5~9.9	32명	공무원, 공기업, NGO, 대학교수 등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2차)	'05.11.14~11.19	32명	공무원, 공기업, NGO, 변호사 등

4) 대통령 지시사항의 수행

국정과제 회의와 국정과제 조정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통령께서 자문을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정리하여 이행정도를 관리하였다. 여기에 결과를 정리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요구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25건으로 2004년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총 17건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8건을 이행중에 있다.

이러한 지시사항 중에는 국정과제의 수립·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기본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 많아 이들 과제를 담당할 팀에서 이행 하였으나 ①골프장 건설관련 규제 개선검토와 ②국토이용 및 보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검토·연구하였고 이를 정책자문 형태로 별도 보고하였다.

①의 골프장 관련사항은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규제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11월에 환경비상시국회의에서는 규제완화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30일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께서 골프장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후 위원회에서는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2005년 4월에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불명확한 규제의 객관화, 건설과정과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 필요, 산지·한계농지·해변구릉지 등은 기존 입지규제 존치 필요, 체육진흥기금의 사회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에 투자 등이다. 대통령 서면보고 후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였고, 그 추진 상황은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②는 역시 2004년 12월 30일 국정과제조정회의 토론시에 대통령께서 “사업이 거론될 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전 국토의 토지이용계획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전문가·시민단체 등 12명으로 연구팀을 구성·운영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05년 11월 대통령께 서면보고 하였다. 현재 업무의 주관부처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정책실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내용은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분산 구축되고 있는 정보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건교부와 행자부 공동관리)으로 연계 통합하여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경부·해수부·농림부·산림청의 보전용도 정보를 체계화·정밀화한 후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 부처별 상호 연계대상 시스템은 행자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건교부 공동)·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시스템·토지작성평가정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국토환경성평가지도,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 등이다.

5)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사전 검토

정부의 주요 중장기계획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는 2002년 6월 제도화된 것으로서 2년 동안에 총 8개의 중장기계획⁶⁾에 대해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0〉 2003~2005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검토·자문한 정부의 39개 주요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 및 의견제출

계획명	의견회신	주관부처
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변경	'04.5.6	해양수산부
②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04~'16)	'04.6.30	건설교통부
③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04.9.21	산업자원부
④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04~'17)	'04.12.23	산업자원부
⑤ 도로정비기본계획('06~'10) 변경	'05.4.26	건설교통부
⑥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05.7.4	환경부
⑦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05.8.11	건설교통부
⑧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05~'20)	'05.8.11	건설교통부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04~'10) 변경

2004~2010년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한 해양수산분야의 종합계획으로서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 첨단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 해양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 검토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6일 해양수산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골자는 ①환경의 지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정책(항만과 물류, 해양첨단산업, 관광산업) 수립의 기본개념 정립(보전과 개발·이용의 조정과 통합), ②중복 또는

6)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5~2015)은 물·국토·자연전문위원회에서 검토중이며 2005년 12월 중 건설교통부에 검토의견 회신예정

유사계획의 통합 시행 및 실행주체의 명확화, ③갯벌 매립, 온배수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시행, ④자원관리형 어업제도 확립과 종 다양성 확보방안 수립·시행, ⑤항만 개발의 시의성 제고와 기존 항만의 효율화 우선 추진, ⑥자연환경과 문화에 기초한 해양관광 진작, ⑦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시행, ⑧남서태평양 도서국가를 포함한 대양 진출을 위한 범지구적 또는 광역적 해양수산 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동 검토의견은 계획안에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유사계획의 통합관리는 부처내 협의 미비로 미반영되었다. 앞으로 계획 시행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체계를 개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크게 확대된 영해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이용 등을 위하여 관련부처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기본계획('04~'16)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국가기본계획이며, 2004~2016년 기본계획(안)은 급수체계 조정, 중장기 개발계획, 용수공급체계 연계이용방안, 수도시설 통합운영, 시설유지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동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 검토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건설교통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골자는 ①환경부의 전국수도종합계획, 건교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의 용수수요 전망치의 객관화 및 비교 필요, ②광역상수도 계획 및 지방상수도 계획과 연계·통합·협력체제 구축 필요, ③물의 지역간 이동에 따른 수량, 수질관리 및 이에 따른 지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④기존 상수원 보호관리 확대 검토, ⑤농어촌 광역상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국고지원방안 수립 필요 등이다. 앞으로 용수수요량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광역상수도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만 근거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수자원관리의 효율화 및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가격, 에너지 대체 및

기술개발, 온실가스배출 저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2004년 8~9월에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2004년 9월 21일 산업자원부에 회신하였다.

그동안 세 차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수단들이 도입·시행되었으나 에너지수요관리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었다.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개선방안으로 ①에너지수요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시장기능 중심에서 기본적인 규제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②에너지절약기술개발 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절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 ③에너지정책에 있어 수요관리의 우선순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라)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04~'17)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매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12월 23일 산업자원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 골자는 ①금번 2차계획에 충분하게 검토 반영되지 못한 수요관리 목표량 설정 평가방안 강구, ②설비계획에서 소규모·분산형 자원의 정책적 관리방안, ③기후변화협약 및 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미래 정책비전 강구, ④수급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⑤송변전설비계획에 있어서 지역간 수급여건 분석을 통한 불평등 해소 등이다.

마) 도로정비 기본계획('06~'10) 변경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3조의2에 의거 수립되며, 2006~2010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업간 연계강화, 효율적 투자방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방안 정립, 지방계획의 중앙정부와 협의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위원회내 전문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 검토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6일 건설교통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골자는 ①기존의 7X9 기간도로망 구상이 타당한지 교통·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필요, ②개인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

및 타 정책과의 연계 필요, ③도로건설 위주에서 도로정비 위주로 정책 전환 필요, ④폐도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친환경적인 도로계획 수립, ⑤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서 도로건설과 온실가스 저감방안과의 연계 및 교통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⑥철도 등 대중교통 투자대비 비교를 통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필요, ⑦환경영향평가 시 사계절 모니터링 등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등이다.

바)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은 환경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서 안전하고 자연미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자연자원 기반 보전과 효율적 이용 등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7개 핵심전략, 국토를 5개 환경관리 대권역과 3대 국토생태축으로 구분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는 2005년 6월 2일, 6월 14일, 6월 21일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안) 검토의견(안)'을 마련,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서면심의(38명 찬성)를 거쳐 환경부에 통보하였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①환경정책 7개 핵심전략별 주요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확대, ②권역별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에 연안, 도서지방 및 해양부문 오염방지대책 추가, ③자연경관, 생태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 또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반영, ④에너지 및 자원관련 정책 중 환경분야 영역에 대한 지표와 방향설정 추가, ⑤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목표 및 지표, 수립주기, 기초정보조사, 권역 설정 등을 상호 연계, ⑥국토개발계획 및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보전 대응정책을 설정, ⑦국가종합환경계획안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5~'20)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2005~2020년 수정계획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아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 검토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1일 건설교통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골자는 ①국토관리의 최상위 계획으로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하위

정책대안 필요, ②환경용량과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③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국토개발과 관련된 여러 계획과 통합적으로 검토 필요, ④국토특성에 적합한 도시적 용지에 대한 정의, 인구의 도시화율의 재산정과 토지이용 전망 등 자료의 객관화로 합리적인 개발계획 도출 필요, ⑤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에 대한 총량과 지역간 배분에 대한 원칙을 정립, ⑥국가기간교통망 구축 개발계획은 국토생태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추진, ⑦공급확대 주택정책보다는 주택과 토지의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⑧경제권, 생활권,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을 위한 권역별 공간단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이가 가능한 광역권 단위를 새롭게 설정하여 국토공간구조를 재검토할 필요, ⑨권역간 핵심 발전전략의 중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⑩육지 중심의 한반도 생태통합망은 남북 접경해역 등 연안역과 연계 등이다.

아) 중부내륙광역권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05~'20)

중부내륙권 권역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2005~2020년 계획은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산업경제기반 구축, 문화·관광개발계획, 교육·보건·복지 시설계획, SOC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환경보전 및 자연경관 관리 및 방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검토소위를 구성하여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 검토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1일 건설교통부에 회신하였다.

제시의견의 주요골자는 ①문화관광개발에 치중한 계획과 과장된 인구 및 산업화 장기전망은 난개발의 요인이 되므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 ②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인근도시, 혁신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등에 대한 연구 필요, ③권역내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등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 계획이 「지역균형개발법」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계획으로 하는 방안 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기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발전 교육정책 수립,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동아시아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지방의제21'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 대비한 국가추진전략에 대한 관련부처·시민단체·전문가의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외원조(ODA) 규모를 2009년까지 2배 증액하는 등 대외원조 정책의 양적, 질적 제고 방안을 이끌어내고,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개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지역단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권화 시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틀로서 '지방의제21'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의제 21이 도입된 이후 정부,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국정과제인 '지방의제21 실천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3월에 걸쳐 '지방의제21 제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였다. 총 30여차례의 연구팀 회의, 지역간담회, 토론회, 부처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은 2005년 6월 지속가능발전 비전 이행체계에 포함하여 발표되었다. 동 방안은 '지방의제21'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검토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내·외부 견해 차이로 사회적 여론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에서도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2002년 제57차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05-'04)(DESD)이 채택되어, 2005년 3월에 출범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2004년 6월 대외협력교육전문위원회에 교육소위원회를 구성, 20여 차례의 전문위와 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05년 6월에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추진 전략 개발연구'를 완료하였다. 연구내용의 일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시 추진전략으로 포함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책화나 제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 학교사회 등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포럼 등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원조(ODA)정책 개선방안은 2기 위원회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3기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대외원조정책을 2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관련기관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4년 12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자문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외원조를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1%수준으로 확대 추진(현재의 2배, 7억 3천만달러), 원조기본법 제정, 종합적인 대외원조 계획의 수립, 대외 원조에 대한 학교와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방안을 토대로 2005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외원조액을 2배로 증액('09년까지 0.1%)하기로 결정하여,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서 'ODA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외원조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리우회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2년 7월 '제1차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워크숍'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에는 요하네스버그의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NCSD간 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국제협력소위 제 1차 회의에서 동아시아 국가간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재구축을 3기 위원회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20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국제협력소위, 관련 국가들과의 준비모임을 거쳐 '제2차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워크숍'이 서울에서 2005년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에는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현황 및 WSSD 후속대책, 지속가능발전 주요현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과제, 향후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일본, 필리핀, 몽골, 중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지속가능발전대사와 UN 지속가능발전국에서도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동 워크숍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서울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먼저 동아시아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단위로 실무팀(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1년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2006년에는 북경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을 연결하고 향후 다른 나라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금 설치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다. 향후 워크숍 개최성과는 UN에 보고될 예정이며, 내년에 개최될 UNCSD 회의와 연계하여 부대행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고 이를 각국에 전파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총회(MDG+5) 참가 및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05.9.13~9.18, 뉴욕), OECD 지속가능발전 전문가회의('05.10.3~10.5, 파리) 등 총 9차례의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노력을 논의하고 홍보하였다.

7) 위원회 주관 자료집 발간과 포럼·워크숍 개최 등

제3기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책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세미나 및 회의 자료집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정책자료와 회의자료는 모두 일정한 편집형식과 표지를 가진 자료집으로 만드는 체제도 갖추었다. 주요 정책 자문 보고서로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2004.2.14),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2004.8.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2005.6.1),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2005.7.1) 등 총 24건이 있으며, 연구용역보고서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정책 수립(2004.8.3),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2005.4.12),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2005.5.17) 등 11건이 있다. 이중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제1차 및 제2차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 교재로 활용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은 출판사를 통해 2005년 1월과 11월에 각각 책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자료집은 총 16건이 발행되었으며, 특히 매 반기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록'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회의, 행사, 언론 보도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상세 목록은 부록 참조).

〈표 11〉 2004~2005년 자료집 발간 건수

계	정책 자문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회의록 (상·하반기)	세미나· 회의자료집	기타
63(건)	24	11	4	16	8

세미나·워크숍 등은 지난 2년간 총 6회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포럼, 세미나, 워크숍과 제2차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워크숍 외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05.6.14, 서울 프레스센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 심포지움('05.10.11, KEI와 공동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위원회의 로고를 2004년 4월에 제작하여 각종 서식, 발간자료, 행사 등에 사용토록 하였음을 소개한다. 위원회 로고는 고철환위원장의 착상과 전문디자이너와의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2003년 10월 완성되었다. 로고의 PCSD 영문자는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제 개념에서 연유한 위원회 이기에 선택된 상징어이다. 무지개 상징그림은 일곱 가지 색깔로써 각각의 색깔이 아름답지만 이들 색깔이 합치면 무지개처럼 더 아름다워진다는 데서 착안하였으며, 시민사회, 기업, 국가가 다양한 의견을 낼 때 각각의 의견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녹여내서 합치면 더 훌륭한 의견이 됨을 의미한다.

〈그림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로고 (2003년 10월 제작)

기본형		국문형	
영문형		혼합형	
혼합 가로형		국문 가로형	

그밖에 2001년 1월부터 구축 운영중이던 홈페이지를 두 차례 개편하였다. 2004년 5월에 1차 개편이 있었고, 2005년 10월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있었다.

국·영문 홍보 팸플릿을 2004년 4월에 발간하였고, 2005년 10월에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계기로 보완하여 재발간하였다. 이 외에 위원장 강연, 방송·신문사 등 언론매체 인터뷰 등이 있었다.

〈표 12〉 2004~2005년 인터뷰와 강연 등의 활동

구 분	횟 수
○ 홈페이지 개편	'04.5, '05.10
○ 위원회 로고 제작	'03.10
○ 국·영문 팸플릿 제작	1
○ 인터뷰(방송, 신문사 등)	14
○ 위원장 강연(KTV, 농림부, 공무원교육원 등)	19

8)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제3기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여 대체적으로는 이전의 위원회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위원회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총무 19명으로 구성된 간사·총무회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본회의 8회, 운영위원회 6회, 전문위원회 76회, 연구소위원회 등 574회 등 총 66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전 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연구소위원회, 검토소위원회, 연구팀의 운영이 3배 이상 크게 활성화된 점이다. 이는 소위원회와 연구팀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정과제 및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검토,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내·외 협력 업무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2004~2005년 회의개최 실적(단위 : 횟수)

구분	계	본회의	운영위	전문위	연구소위 등
계	664	8	6	76	574
2004년	402	4	4	36	358
2005년	262	4	2	40	216

〈표 14〉 2004~2005년 각 전문위원회별 소위원회 및 연구팀 개최 실적(단위 : 횟수)

구분	소위원회 및 연구팀	'04	'05	계
소 계(37개)		358	216	574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8	10	18
	소위원회 및 연구팀	31	17	48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연구팀	5	-	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 소위원회	8	8	16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연구 소위원회	7	-	7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연구 소위원회	7	-	7

구분	소위원회 및 연구팀	'04	'05	계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현장적응가능성 연구 소위원회	4	9	13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4	8	12
	소위원회 및 연구팀	117	54	171
	갈등해결정책연구팀	9	-	9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준비팀	20	-	20
	법·제도개선팀	12	9	21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	17	-	17
	한탄강댐갈등조정 회의	24	-	24
	한탄강댐갈등조정 소위원회	27	-	27
	한탄강댐갈등조정 소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6	-	6
	갈등관리교육교재개발 및 전문가 양성 워크숍 준비위원회	-	41	41
	갈등포럼 준비 소위원회	2	4	6
물·국토·자연 정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10	9	19
	소위원회 및 연구팀	99	90	189
	물관리정책연구팀	12	-	12
	물관리정책 국정과제보고 준비회의	28	21	49
	교통정책연구팀	14	18	32
	국토정책연구팀	16	17	33
	연안 및 해양정책연구팀	11	-	11
	골프장 건설규제개선안 자문보고서 작성팀	9	-	9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 소위원회	8	23	31
	국토이용보전 세분화 정책자문연구팀	-	11	11
	해양정책연구보고서 작성팀	1	17	18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8	4	12
	소위원회 및 연구팀	84	30	114
	에너지정책연구팀	5	-	5
	'20년 에너지예측·분석팀	19	-	19

구분	소위원회 및 연구팀	'04	'05	계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에너지정책·공론화팀	8	-	8
	에너지기본법 검토 소위원회	3	-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검토 소위원회	3	-	3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연구팀	9	1	10
	기후변화대응정책연구팀	14	9	23
	장기전원구성정책연구팀	12	11	23
	에너지정책공론화방안연구팀(방폐장정책)	11	6	17
	산업정책연구팀	-	3	3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6	9	15
	소위원회 및 연구팀	27	25	52
	국제협력 소위원회	6	8	14
	교육 소위원회	5	3	8
	지방의제21연구팀	8	12	20
	지방의제21 소위원회	8	2	10

2003~2005년의 2년 임기 동안 각 위원회별 평균 회의참석율은 본위원회 47.2%,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54.3%, 물·국토·자연정책 전문위원회 51.4%, 에너지·산업정책 전문위원회 62.8%,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44.7%,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56.7% 이다.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참석율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2004~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의 참석율(%)

구분	본위원회	사회·환경·건강 전문위	물·국토·자연 전문위	에너지·산업 전문위	갈등관리정책 전문위	대외협력· 교육전문위
평균	47.2	54.3	51.4	62.8	44.7	56.7
2004년	46.1	59.4	54.4	70.7	52.5	62.5
2005년	48.4	49.2	47.4	51.8	37	50.8

9) 위원회 예산

위원회 예산은 2003년에 4.7억원에서 2004년 13억원, 2005년에는 16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표 16〉 2004~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산(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4년 예산 (A)	'05년 예산 (B)	증감 (B/A, %)
총 계	1,300	1,600	23
비정규직 보수	41	52	27
관서운영비	631	751	19
여비	243	264	9
업무추진비	122	124	2
연구용역비	100	240	40
직무수행경비	85	95	12
시설비	30	30	0
자산취득비	48	44	0

부 록

- 1) 위원회 연혁
- 2) 제3기 위원회 명단
- 3) 주요 정책 자문보고서
- 4) 2003.12 ~ 2005.12 주요 회의

1) 위원회 연혁

〈표 17〉 1, 2,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구성 비교

구 분	위 원 구 성
제1기 위원회 (2000.9.20~2002.9.19)	○ 강문규 위원장 - 당연직 위원 13명, 위촉위원 20명 등 33명
제2기 위원회 (2002.10.4~2003.6.25)	○ 박영숙 위원장 - 당연직 위원 13명, 위촉위원 21명 등 34명
제3기 위원회 (2003.12.15~2005.12.14)	○ 고철환 위원장 -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 48명, 위촉위원 29명 등 77명

〈표 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연혁

일 자	주 요 내 용
제정 2000.8.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35인 이내, 임기 2년, 당연직 13명) -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대한 자문 수행
1차 일부개정 2002.6.3	○ 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40개)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사전검토하도록 법제화
2차 전문개정 2003.6.2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확대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 개편(25인 이내 위촉위원) -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제 폐지,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 참석 가능 -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중전 분과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기관에 '지속가능발전팀' 설치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3차 일부개정 2003.6.30	○ 별표 '주요 중장기계획'중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계획명 개정
4차 일부개정 2003.11.1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확대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추가 ○ 기능 강화에 따른 조직 개편 - 위원수를 80인 이내로 확대(시·도별 3명 추천, 이외 대통령이 위촉) ○ 위원윤리규범 근거 마련

〈표 19〉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경과

'03.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세계의 동향 및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참여정부의 나아가야 할 과제를 도출
'03.3 ~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방안 마련
'03.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8016호) 공포 - 에너지, 물대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
'03.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위원장 내정(서울대 고철환 교수)
'03.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기능을 보강하도록 지시(제35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 사회적 갈등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국가발전에 지장을 줌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 연구, 정책적 자문 등의 필요성 증대
'03. 8.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조정기능 수행방안 논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F 구성·운영 - 전문가(조명래, 이영희, 구도완, 조승헌, 강영진), 청와대, 환경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자 참여
'03. 8. 27~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03.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정책협의회시 대통령께서 제안 설명
'03.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개정 추진 -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존 기능을 강화 - 갈등해결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 ※ 공론형성과 자문사항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고려, 위원을 80명으로 구성(시도추천 48명, 대통령 지명 32명)
'03. 9. 29~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기능 개편 및 위원추천 관련 위원장 시·도 순회 설명회
'03.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 지속가능위 기능 개편 및 역할강화 토론회 개최
'03.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개정·공포(국무회의 의결)
'03.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

2) 제3기 위원회 명단

〈표 20〉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별 위원명단

위원회명	위원명단
본위원 (76명)	고철환, 강규석, 고창실, 공이송, 김강렬, 김경량, 김경희, 김기수, 김두희, 김미선, 김삼룡, 김성구, 김승묵, 김웅배, 김정욱, 김주영, 김희경, 김희은, 류창우, 문국현, 박광섭, 박성인, 박재묵, 박종식, 박효숙, 배은하, 서원명, 서정의, 송남수, 송효상, 신혜수, 오홍숙, 우봉제, 유지나, 이근범, 이기영, 이문교, 이병해, 이삼열, 이상훈, 이석영, 이수영, 이영자, 진월스님, 이원탁, 이종만, 이진, 이태훈, 이필원, 이학영, 이해경, 이희원, 임숙경, 현고스님, 장성효, 장희익, 전성환, 전형준, 전호영, 정광화, 정대연, 정용하, 정진승, 지영선, 최상림, 최정철, 최태길, 최형재, 하선규, 하성룡, 한경호, 한영주, 한지현, 허상수, 홍덕률, 홍청자
운영위원회 (19명)	고철환, 염태영, 공이송, 김기수, 김삼룡, 김승묵, 박광섭, 박재묵, 이진, 이병해, 이삼열, 이상훈, 이영자, 이학영, 정갑식, 조명래, 지영선, 허상수, 허은녕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30명)	이영자, 허상수, 강상인, 고희림, 구자건, 권영근, 권호장, 김두희, 김미희, 김자혜, 김준식, 김택천, 문태훈, 손혁재, 신영철, 안병욱, 여진구, 오영석, 오정래, 이미영, 이정섭, 이태훈, 이필원, 임숙경, 전형준, 정광화, 정대연, 정영근, 조영숙, 하선규,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30명)	김승묵, 박재묵, 강명구, 강영진, 김광식, 김선빈, 김유환, 김환식, 김희은, 류병윤, 박수선, 박오순, 신창현, 양세진, 이근범, 이선우, 현고스님, 장성효, 전성환, 전재경, 정용하, 정진승, 조상행, 최정철, 홍준형, 한영주, 최미희, 이영민, 이영희, 김종현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30명)	고기원, 김석봉, 김성구, 김제남, 김홍상, 류영창, 박용남, 박정현, 변병설, 변창흠, 서원명, 성익환, 양근율, 오성규, 윤석영, 이은희, 이재준, 이지훈, 이창수, 이창희, 이한수, 전병성, 정갑식, 조중래, 지영선, 진장원, 최명철, 최연홍, 최지용, 황상규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30명)	강광규, 강정민, 김강렬, 김경식, 김정인, 김종달, 김창섭, 김태호, 김혜정, 김호철, 민만기, 박종식, 석광훈, 신부식, 신성철, 오대균, 윤순진, 이병욱, 이상영, 이진, 이은영, 이필렬, 이학영, 전성환, 전호영, 정종관, 주봉현, 한승호, 허은녕, 홍현중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30명)	이삼열, 조명래, 김경량, 김경희, 김광식, 김광철, 김일태, 김재관, 김춘이, 박상수, 박영우, 박은경, 박효숙, 신혜수, 유성, 유문중, 유영국, 유지나, 이강실, 진월스님, 이인경, 이정수, 이창우, 임낙평, 임정근, 정병준, 조현, 최명숙, 최진하, 한경호

3) 주요 정책 자문보고서

〈표 21〉 2003~2005년 발간정책 자문보고서명과 발간일

제 목	발간일
갈등해결시스템 중간보고서	'03.11.28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03.12.31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보고자료 슬라이드 요약)	'03.12.31
갈등예방 및 관리 매뉴얼	'04. 2.1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04. 2.1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수정보완판)	'04. 4. 2
국가에너지 장기정책방안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04. 5.12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 활동결과 보고서	'04. 5.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과제	'04. 6.22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04. 8. 1
갈등관리기본법 및 법·제도개선	'04. 9.23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04. 10. 1
대외원조(ODA) 정책 개선방안	'04.12.30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05. 2.16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05. 3. 3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활성화 방안	'05. 4.2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활성화방안	'05. 4.22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05. 5.12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05. 5.19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정책	'05. 5.27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정책과제	'05. 6. 1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운영소위원회 활동보고서	'05. 6.10
공공갈등 관리의 이론과 기법	'05. 7. 1
한탄강 갈등조정 종합평가 보고서	'05.10.14

〈표 22〉 기타 외부 연구과제 연구용역보고서

제 목	발간일
갈등예방 및 해결프로세스 Mapping을 위한 연구	'04. 4.18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안 작성을 위한 연구	'04. 5.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04. 5. 3
지속가능한 국가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04. 8. 3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연구	'05. 4.12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전원계획평가 연구	'05. 2. 4
지방의제21 제도화방안 연구	'05. 2.2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실행전략 개발연구	'05. 6. 9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준비를 위한 연구	'05. 5.29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분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05. 5.17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05.10.14

4) 2003.12 ~ 2005.12 주요 회의

〈표 23〉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국정과제 회의 등의 일자별 회의명

일 자	회의명
2003. 12. 15 12. 24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국정과제회의 보고
2004. 1.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차 본회의 개최
2. 4	본위원회 간사·총무단 제1차 회의
2. 10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차 간사회의
2. 12	건설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2. 1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국정과제회의 보고
2. 13	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
2. 19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차 간사·총무회의
3. 3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3. 10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3. 11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3. 12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3. 19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3. 23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3. 24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3. 3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3. 30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2차 간사회의
4. 8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4. 8	국정과제위원회 대통령 현안보고
4. 9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4. 9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추진과제 워크숍
4. 12	청와대·국정과제위원회 직원 워크숍
4. 20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간사·총무회의 1차 회의
4. 23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간사·총무회의 2차 회의
4. 23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4. 30~31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5. 14	갈등관리지원센터설립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 14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5. 19	산업자원부 연두 업무보고
5. 20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5. 27	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 검토소위 제1차 회의
6. 4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간사·총무회의 3차 회의
6. 7	수도정비기본계획수정(안) 검토소위 제2차 회의
6. 10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6. 11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6. 17	균형발전위원회 국정과제 회의
6. 22	제1회 갈등관리 포럼

일 자	회의명
6. 24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 회의 보고
6. 25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ODA정책관련 워크숍
7. 2	갈등관리 세미나
7. 9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7. 15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7. 28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정책 워크숍
7. 29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8. 21	정책사례분석 토론회
8. 25	제1회 국정과제 조정회의
8. 26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9. 10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9. 10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9. 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9. 15	에너지기본법 관련 국정과제 조정회의
9. 16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9.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차 본회의
9. 20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확대 간사회의
10. 8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10. 11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10. 13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10. 14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10. 1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 연찬회
10. 25	본위원회 간사·총무단 제2차 회의
10. 27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10. 2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11. 2	국정과제 조정회의
11. 3	‘국가에너지’ 자문회의
11. 10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11.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차 본회의
11. 22	본위원회 간사·총무단 제3차 회의
11. 25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11. 26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12. 9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12. 14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12. 17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12. 2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12. 30	국정과제 조정회의
2005. 1. 12	제7회 국정과제 조정회의
1. 13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1. 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4차 본회의
1. 20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1. 20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1. 26	국정과제 조정회의
2. 17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일 자	회의명
2. 17	제9회 국정과제 조정회의
2. 23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2. 25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3. 3	산업자원부 연두 업무보고
3. 4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3. 7	건설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3. 9	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
3. 10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
3. 11	국가에너지 자문회의
3. 15	농림부 연두 업무보고
3. 21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
3. 22	국정과제 조정회의
3. 24	문화관광부 연두 업무보고
3. 31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3. 31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
4. 1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4. 15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4. 15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 워크숍
4. 28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4. 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차 본회의
5. 6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5. 13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5. 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차 운영위원회
5. 19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5. 26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
6. 1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핵심이행과제관련 국정과제 조정회의 보고
6. 2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6. 3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6. 4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6. 14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6. 14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국내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6. 16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
6. 21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
6. 22	‘연안·해양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
6. 24	국정과제 조정회의
6. 29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6. 29	제113차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
7. 7 ~ 8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
7. 14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최
7. 18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7. 18	새천년선언 이행검토를 위한 정상급 회의준비 간담회
7. 21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7. 28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8. 23	대의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8. 23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8. 25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

일 자	회의명
9. 2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9. 7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간사·총무단 회의
9. 5 ~ 9	제1차 갈등관리 전문가양성 워크숍
9. 23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
9. 23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
9. 23	국정과제 조정회의
9. 29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10. 1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국제워크숍
10.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6차 본회의
10. 12	제125차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
10. 19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 보고
10.20~21	제2차 동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10. 21	사회·환경·건강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
10.24~11.17	본위원 지역 순회 간담회(5대권역 10개지역)
10. 27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11. 2	‘지속가능한 교통관리 정책’ 국정과제회의 보고
11.14~18	제2차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숍
11. 17	물·국토·자연 전문위원회 제19차 회의
11. 30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12. 1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
12. 2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12. 9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12. 1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7차 본회의 및 제3기 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대회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

발간위원

박재묵(충남대학교 교수), 지영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영자(가톨릭대학교 교수), 허은녕(서울대학교 교수),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염태영(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분야별 원고 집필 위원

박재묵(충남대학교 교수), 김유환(이화여대 교수), 전재경(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홍준형(서울대학교 교수),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익철(지속가능전략연구소 소장),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윤순진(서울대학교 교수), 김인숙(LG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황희연(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원(충주대학교 교수), 강대석(부경대학교 교수), 안병옥(환경연합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정대연(제주대학교 교수),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이재영(공주대학교 교수),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정갑식(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은녕(서울대학교 교수)

기획운영실

최진석(수석연구위원), 박미자(기획총괄팀장), 이규만(사회·환경·건강팀장), 한기준(물·국토·자연팀장), 이상현(에너지산업팀장), 김경원(갈등관리팀장), 고재경(대외협력교육팀장)